한국정책개발학회-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

2026 하계 학술대회

인구위기·지방소멸 시대의 정책 설계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

2026. 8. 27.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주최: KAPD 사단법인 한국정책개발학회 주관: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정책개발학회-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
2026 하계 학술대회

인구위기·지방소멸 시대의 정책 설계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

2026. 8. 27.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주최: KAPD 사단법인 한국정책개발학회 주관: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정책개발학회-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6년도 하계 공동 학술대회

1 추진 개요

□ 일 시: **2026. 8. 27.(목) 14:00 ~ 17:40**

□ 장 소: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 **501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70, 501호

□ 대주제: 인구위기·지방소멸 시대의 정책 설계
-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

□ 주 최: 한국정책개발학회

□ 주 관: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참석자: 한국정책개발학회 임원 및 회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진, 정책개발에 관심이 있는 학생·연구자 등

□ 행사 일정(안) ※ 세부일정 일부 변동 가능

시 간	(분)	주요 내용	
14:00~14:30	'30	등록	
14:30~14:50	'20	**개회식** * 사회: 김종규 박사(총무위원장) • 취임식 및 개회사: 황종석 한국정책개발학회장 • 환영사: 안세현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 위촉식: 편집·연구·총무·대외협력·섭외홍보 위원장 등	
14:50~15:00	'10	기념사진 촬영 및 행사장 정리	
15:00~15:40	'40	**세션 1**	**저출산 대응 정책 설계**
15:40~15:50	'10	휴식	
15:50~16:30	'40	**세션 2**	**지방소멸 대응 정책 설계**
16:30~16:40	'10	휴식	
16:40~17:20	'40	**세션 3**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설계**
17:20~17:40	'20	**< 총회 >**	
17:40~17:50	'10	폐회 및 행사장 정리	
17:50~19:00	'70	만찬(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이룸라운지)	

2 세션 구성(안)

※ 일부 발표 및 토론 온라인 병행 운영

□ **세션 1**(15:00~15:40) / **세션 2**(15:50~16:30) / **세션 3**(16:40~17:20)

저출산 대응 정책 설계	
통합 좌장	· 진윤희(단국대)
세션 1 발표	· 최성혜(단국대) : 괜찮은 일자리 진입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지정 토론	· 김상민(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소멸 대응 정책 설계	
세션 2 발표	· 정경훈(서울대) : 지방소멸 대응 성과 측정을 위한 생활인구 지표 구축방안
지정 토론	· 방호준(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토론영상 온라인 송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설계	
세션 3 발표	· 차경란(단국대) : 정서적 고갈과 사회적 고립감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지정 토론	· 진현희(단국대)

취 임 사

존경하는 한국정책개발학회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정책개발학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책임을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06년 처음으로 학회에 발을 들여 놓은 지 2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일천한 학문적 소양에도 불구하고 박용치 교수님을 비롯한 선배·동료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정책개발학회는 2000년 1월에 창립되어 매년 2회의 정기 학술발표대회와 수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 연구결과물을 학술지로 발간하여 정책 대안 제시에 힘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과 대내외 단체 상호간에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에 적용 가능하고 실효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연구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책연구의 산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선대 회장님들과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얻은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구 구조의 변화, 기후 위기, 기술 급변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실효성을 있는 정책개발 연구와 대안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학회 회원여러분!

한국정책개발학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행정제도 개선, 사회문제 해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연구, 학술회의와 토론의 장 활성화 및 정책 개발 연구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학문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정책 현안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학문적 교류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학회가 정책 개발의 중심적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학회의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신임 회장으로서 학회 운영과 활동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원의 지속적 확대와 참여를 높여 학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가 대한민국 정책개발 산실로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회원 확대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학회의 내실 있는 발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 확대 운동을 전개하고 회원들이 학회 운영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화합하고 배려하는 학회 분위기 조성과 유대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편집위원회와 연구위원회 등 조직 구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연구의 우수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회의 명성과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집행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강화하고, 위원장 회의 강화, 학술토론회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연구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는 '정책개발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술지 발간과 내용의 우수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우수정책 발굴 시상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개발을 선도하고 학술단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학회의 위상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공공기간마다 우수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대상 '대한민국 정책개발대상(가칭)'을 제정하여 지방자치, 지역발전, 재정 등 다양한 분야와 기관의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학회의 정책개발 연구역량 증대와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편 우리 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논문 시상제(우암학술상)를 활성화하여 회원들의 연구활동 참여와 학회의 연구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회의 조직과 운영을 재정비하고 회원의 화합과 유대를 강화하여 학회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단합대회, 워크숍, 경조사 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회의 대외 창구로서 학회 홈페이지 관리를 강화하여 회원과 방문자들의 편의와 학회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학회 회원여러분!

우리 학회는 그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이론과 실제가 구비된 실사구시의 정책개발 연구단체로 꾸준히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과 성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회장으로 선임된 이유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우리 학회가 성숙한 학술단체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라는 회원들의 요구와 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맡은 막중한 책임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

회 입문의 초심과 경험을 되살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한국정책개발학회가 단지 연구의 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와 임원진은 회원 여러분의 뜻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학회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한국정책개발학회 회장 황 종 석

개 회 사

존경하는 한국정책개발학회 회원여러분!

2026년도 한국정책객발학회와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개최하는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신 회원 및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학술 발표를 해주실 발제자와 토론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정책개발학회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개발하고 성과 제고에 기여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연구역량을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하계학술대회도 새로운 정책을 창출하고 다중 지성을 모으는 실천적 과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정책 환경은 변화를 넘어 대전환의 시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 지방소멸, 기후위기, AI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경제 안보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은 우리에게 혁명적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에서는 “저출생·초고령사회,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정책 설계”라는 주제로 학술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국가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저출생·초고령사회, 지방소멸에 대한 다양한 요인과 실태에 대한 분석과 논의 그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한국정책개발학회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학회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참석하신 학회 회원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한국정책개발학회 회장 황 종 석

환 영 사

한국정책개발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서가 지났음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립대학교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 학장이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국제관계학과 교수 안세현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사회 전반의 문제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총 10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행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자정부연구센터, 사회적기업연구협력센터, 공공부문혁신·평가연구센터, 지역사회협력센터 등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통일평화센터, 서울경제연구센터, 복지사회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사회발전에 관한 여러 분야의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개발학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용치 교수님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등재학술지를 연 2회 발간하는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정기학술대회를 비롯한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해 학문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저출생·초고령사회,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정책 설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이자 대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저출생·초고령사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학술대회가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안 세 현

한국정책개발학회 하계 정기총회

■ 감사 선임의 건(정관 제11조 제1항)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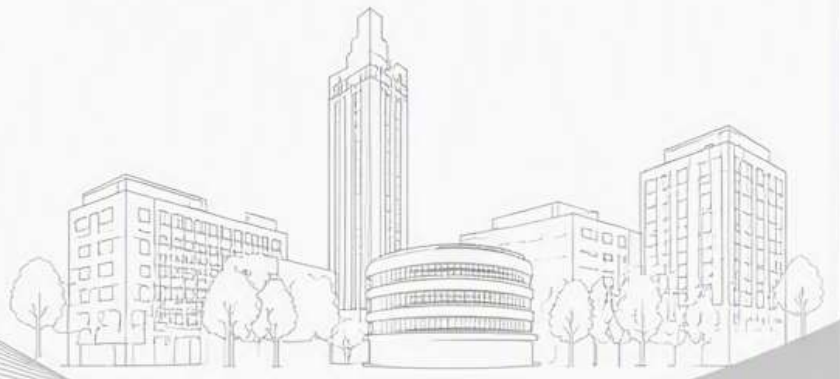
■ 기타 안건

한국정책개발학회-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
2026 하계 학술대회

세션1: 저출산 대응 정책 설계
괜찮은 일자리 진입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2026. 8. 27.

발제: 최성혜(단국대)
토론 : 김상민(한국토지주택공사)



괜찮은 일자리 진입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 4년제 대학 졸업 취업자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최성혜

목차

1. 연구배경
2. 문헌고찰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연구배경

초고령사회: 노인인구 증가 뿐만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사회 보장 부담의 확대를 수반함

청년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진입: 소득형성, 주거 • 경제적자립 및 사회보험 가입 지연으로 이어짐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위한 정책 필요: 미래 노동력 확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초고령사회 대응은 노년기 지원 뿐만 아니라
청년의 안정적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

1. 연구배경

20~29세
청년층의
실업률 6.8%

전체실업률
2.6%

통계청
(2026.07)

20~39세

'쉬었음' 청년

71만 7천명
(역대 최대 기록)

서울신문
(2026.07.17)

지난 4년간
AI 확산에
청년일자리
28.5만개 감소

초급 사무·분석
인력 신규 채용
감소

헤럴드경제
(2026.08.18)

청년고용의 양적 회복만으로는 질적불안을 설명하기 어렵다.

2. 문헌고찰

인적자본이론

-교육, 기술,스펙 등 인적자본과 노동 시장 성과의 관련성

-한계:상향평준화된 현대 청년의 성과 격차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함

통계적차별이론

-불완전한 정보 상황에서 집단 평균을 이용해 개인의 생산성을 판단하는 과정

-한계:외적 속성 및 구조적 한계에만 집중

사회인지진로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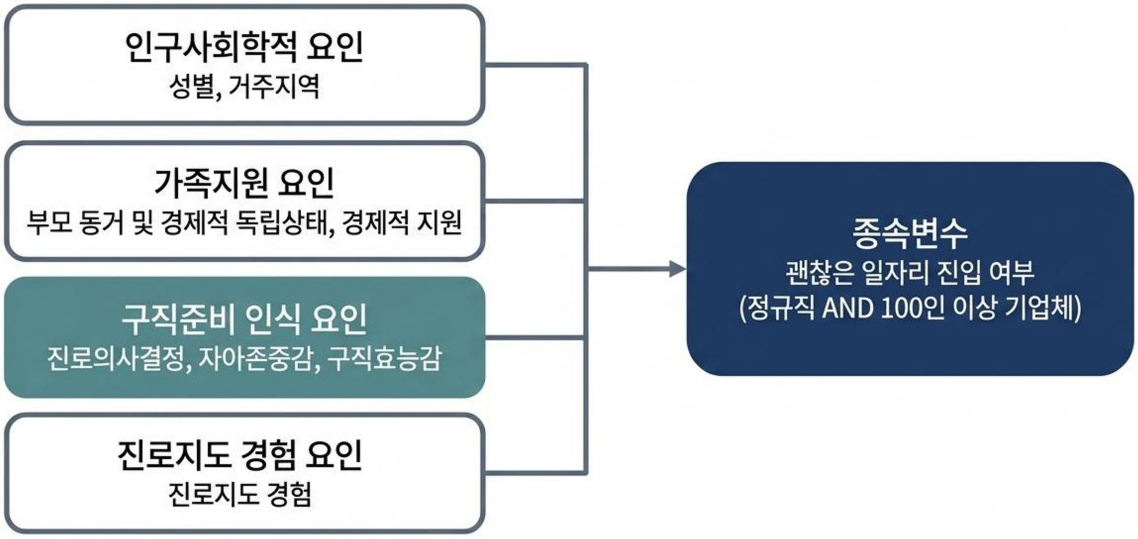
-심리적·인지적 특성과 주변 환경이 상호작용 하여 진로가 형성

-연구적용: 진로의사결정, 자아 존중감, 구직효능감 등 내적 역량의 실증적 검증

개인의 특성 뿐만 아니라 가족 • 지역 • 제도적 조건과의 관련성을 검토

3. 연구방법

〈 연구모형 〉



3. 연구방법

〈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성별 및 거주지역은 4년제 대졸 취업자의 괜찮은 일자리 진입 여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노동시장 기회구조의 차이)

연구문제 2. 부모 동거 및 경제적 독립 상태, 가족의 경제적 지원 여부는 4년제 대졸 취업자의 괜찮은 일자리 진입 여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구직기간과 일자리 선택의 자원)

연구문제 3. 진로의사결정, 자아존중감 및 구직효능감은 4년제 대졸 취업자의 괜찮은 일자리 진입 여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노동시장 이행의 심리 · 인지적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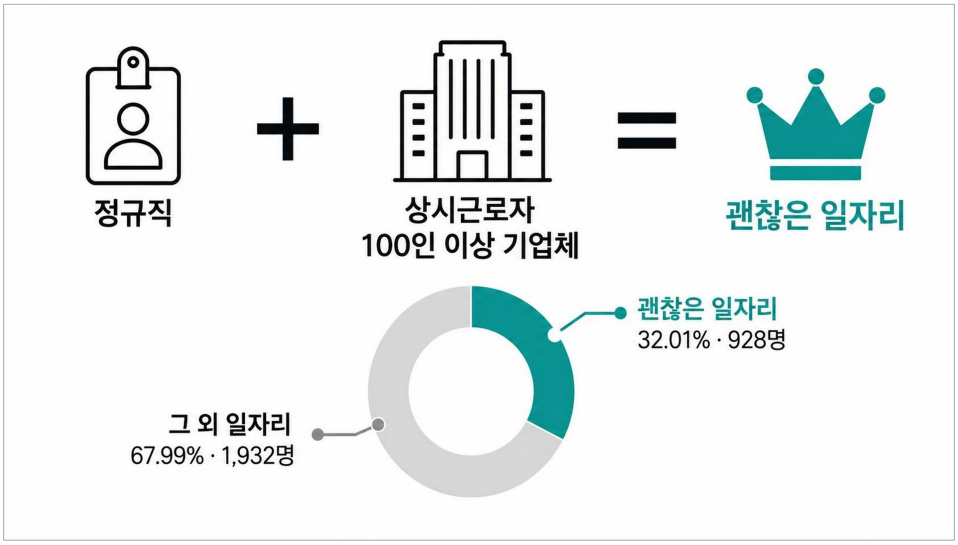
연구문제 4. 진로지도 경험 여부는 4년제 대졸 취업자의 괜찮은 일자리 진입 여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제도적 지원과 준비행동)

청년패널조사(YP2021) 4차(2024년) 표본 추출



- StataNow 19.5 SE
- YP2021 제4차 횡단면 가중치 적용

4. 연구결과: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의 조작적 정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 중 32.01%만이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

4. 연구결과: 일자리 집단별 연속형 변수의 평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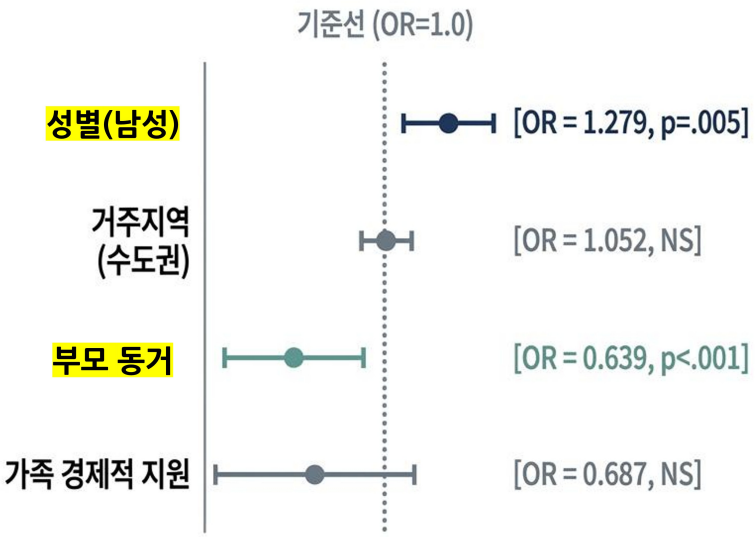
구직준비 인식 요인(심리적 · 인지적) 세가지 모두
괜찮은 일자리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통계를 보임

4. 연구결과

남성의 진입 오즈가
27.9% 높음

부모동거 · 경제적 독립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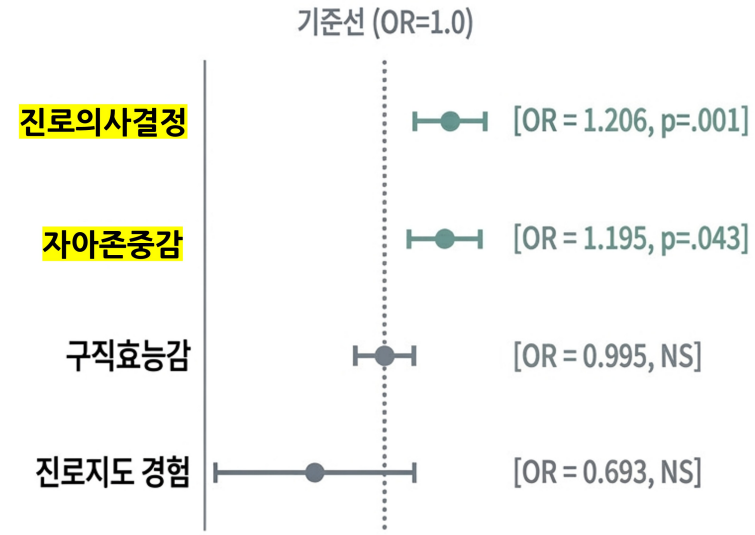
-독립: 40.83%
-미독립: 30.25%
-동거:28.25%



4. 연구결과

진로의사결정 1점 증가시
진입 오즈 20.6% 상승

자아존중감 1점 증가시
진입 오즈 19.5% 상승



4.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요인

성별: 남성 +27.9%	OR=1.279, *p*=.005
부모 동거: -36.1%	OR=0.639, *p*<.001
진로의사결정: +20.6%	OR=1.206, *p*=.001
자아존중감: +19.5%	OR=1.195, *p*=.043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요인

거주지역(수도권)	OR=1.052, *p*=.570
가족의 경제적 지원 여부	OR=0.687, *p*=.207
구직효능감	OR=0.995, *p*=.952
진로지도 경험 여부	OR=0.693, *p*=.551

주: 구직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α=.544였으며, 진로지도 경험 집단의 비가중 사례 수는 17명

5. 결론 및 제언

정책적 제언 ①

취업률 중심에서 일자리의 질 중심으로

1. **정책 평가의 전환**
   취업자 수와 취업률뿐 아니라 고용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을 함께 평가
2. **다차원 지표 활용**
   고용형태·기업체 규모·임금·사회보험·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성별 격차 점검**
   채용·배치·직종·고용형태의 차이를 점검하고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

청년고용정책의 성과를 '취업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일자리에 진입했는가'로 평가

5. 결론 및 제언

정책적 제언 ②

고용·주거·경제적 자립 지원의 연계



맞춤형 욕구 파악

고용상태·소득·주거비 부담·부채·
경제적 자립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



서비스 통합 연계

진로·고용서비스와 주거지원·생활안정·
자산형성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지역 복지기관을 연계해
개별 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

부모 동거 및 경제적 독립 상태와 괜찮은 일자리 진입 간 통계적 관련성 확인

청년의 고용 문제와 생활 문제를 분리하지 않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5. 결론 및 제언

정책적 제언 ③

진로지원과 심리·정서 지원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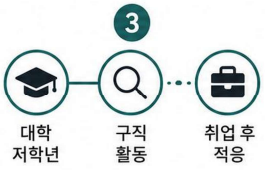
단계별 진로지원

자기이해 · 직업탐색 · 진로목표 설정·
실행계획 수립을 연속적으로 지원



심리·정서 지원

취업 스트레스와 심리적 위축을 파악하고
강점관점 상담·집단상담과 연계



지속적 지원체계

대학 저학년의 진로탐색부터 구직활동·
취업 후 적응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진로의사결정과 자아존중감은 괜찮은 일자리 진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 확인

구직기술 중심 지원을 넘어 진로역량과 심리적 자원을 함께 강화

5. 결론 및 제언

〈 연구의 한계점 〉



〈 주요 참고문헌 〉

김주희. (2025). 청년의 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다차원적 분석: 인적자본,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세연. (2023). 대학생의 구직효능감 및 진로성숙도 변화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취업진로연구, 13(3), 19-40.

박미정. (2024). 4년제 인문·사회계열 대졸자의 취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신문. (2026. 7. 17.). 알바·취준 쉴 틈 없는데…'쉬었음'으로 묶인 72만 명.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NEET-Youth-Tracker/2026/07/17/20260717004002

이지우. (2019). 청년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의 영향요인에 관한 지역 간 비교 연구: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한국고용정보원. (2026). 청년패널(Youth Panel) 2021 1-4차 조사자료 User's Guide. 고용조사 분석시스템. https://survey.keis.or.kr/index.jsp

한국일보. (2026. 8. 12.).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다'…청년 실업률 4년 만에 최고치.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1210080004471

헤럴드경제. (2026. 8. 18.). 청년층의 '첫 경력' AI에 막혔나…4년 새 줄어든 일자리 94%가 고노출 업종.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44021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Q & A-

한국정책개발학회-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
2026 하계 학술대회

세션2: 지방소멸 대응 정책 설계
지방소멸 대응 성과 측정을 위한 생활인구 지표 구축방안

2026. 8. 27.

발제: 정경훈(서울대)
토론: 방호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제의식

연구의 세 가지 출발점

1 **공간의 관점 — 도시계획**
인구를 규모가 아닌 공간적 분포와 이동으로 파악

2 **측정의 관점 — 체류인구**
측정기술의 발달로 거주인구가 아닌 체류(생활)인구를 포착

3 **제도의 관점 — 지방재정 지표**
체류인구의 재정지표 반영 여부와 그 방법

세 관점이 교차하는 지점에 공백이 존재.
생활인구는 이미 측정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은 여전히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작동.

2

문제제기

재원 규모가 아닌, 선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문제

연 1조 원

2022~2031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 7,500억 · 광역 2,500억)

9,500억 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기금 미집행액 (2026. 7.)

89 + 18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2026년 재지정 예정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재원 확충이 아닌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한 정확한 사용 대상 및 방법 수립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2026.7), 행정안전부

3

현황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 가지 수단

지방소멸대응기금

- 2022~2031년, 매년 1조 원
-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
-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
- 투자계획 평가 등급별 차등 배분

보통교부세

- 재정부족단체 일반재원 보전
- '생활인구 ' 를 통한 수요반영
  → 2025년 산정분부터 적용

지방재정분석

- 243개 지방정부 결산자료 기반
- 우수단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 부진단체 맞춤형 재정컨설팅

세 가지 수단 모두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별개의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제55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4

핵심 진단

인구 정의의 제도 간 불일치

재정수단	측정 대상	데이터 원천	적용되는 인구의 정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완성도 · 집행 실적 · 사업 성과	계획서, 집행률, 현장평가	명시적 인구 개념 없음
보통교부세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실험적통계(모바일 · 카드)	생활인구 (등록 + 체류)
지방재정분석	결산상 재정건전성 · 효율성 지표	243개 지자체 결산자료	등록인구(주민등록)

측정 기준이 다르면 성과의 정의도 달라짐

동일 지자체가 기금 평가에서는 우수, 재정분석에서는 부진 판정을 받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가능
세 제도가 상이한 인구 개념을 전제하는 한, 지방정부는 어느 신호를 따라야 할지 판단 불가

5

제도 변화

이미 진행 중인 제도 전환



측정 기준은 전환되었으나, 재정 성과관리 체계는 아직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2026), 국가데이터처

6

개념

생활인구의 개념과 산정 기준

등록인구

주민등록 인구
+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

생활인구

행정안전부 · 국가데이터처
분기별 공표 (2024~)

⚠ 생활인구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실험적통계' : 신뢰성 및 타당성의 확인·점검이 필요하며, 개선 과정에 있어 공표 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동될 수 있는 통계

그럼에도 이미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26년 1/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

데이터 구조

생활인구의 산정 구조와 측정 한계

결합되는 원자료

- **주민등록자료**
  행정안전부
- **등록외국인자료**
  법무부
- **모바일 이동정보**
  통신 3사
- **신용·체크카드 승인액**
  6개 카드사

가명결합 후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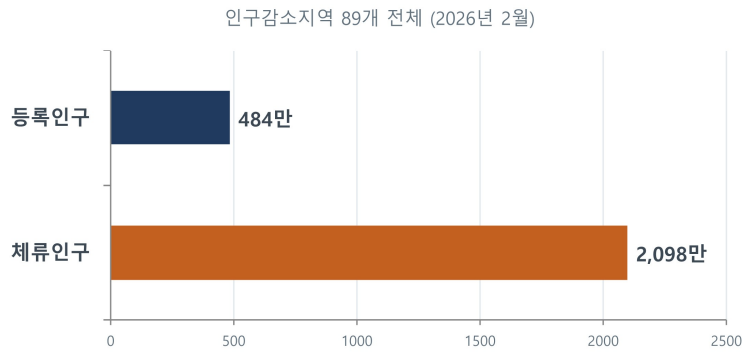
측정 한계

1. **통신 3사 외 이용자 누락**
   성별·연령별·내외국인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지만 실제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카드사 범위 변경**
   '25년 1분기부터 2개사(농협·KB) 추가 — '24년 공표 수치와 직접 비교 곤란
3. **실험적통계**
   신뢰성 점검과 개선 과정에 있어 공표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4. **개인 단위 추적 불가**
   같은 사람의 반복 체류가 중복 계산되어 배수의 단순 해석에 주의 필요

자료: 국가데이터처 나우캐스트 「생활인구 이용자 유의사항」, 행정안전부

데이터 ①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4.3배



2,582만 명
생활인구 총계

2,098만 명
체류인구

4.3배
등록인구 대비 배수

등록인구만으로 재정수요를 산정할 경우, 실제 행정수요의 상당 부분이 통계에서 누락됨

자료: 국가데이터처 「'26년 1/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2026). 등록인구는 생활인구-체류인구로 산출

9

데이터 ②

지역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체류인구

33%
인구감소지역 전체
체류인구 카드사용액 비중

47% ↑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구 카드사용액 비중

12.7만 원
인구감소지역 1인당
평균 카드사용액 (1분기)

소비가 집중되는 업종

음식 · 종합소매 · 운송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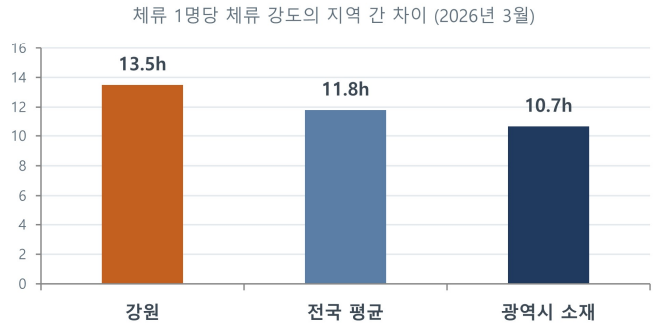
모두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담당하는 업종이다.
체류인구는 통계 밖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지역경제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26년 1/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2026)

10

데이터 ③

총량 집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체류 강도



총량 지표가 놓치는 것

생활인구를 명수로만 집계할 경우, 하루 3시간 체류자와 종일 체류자가 동일하게 집계됨

강원과 광역시 소재 지역의 체류시간 차이는 약 2.8시간으로, 동일한 규모의 생활인구라도 지역이 실제로 감당하는 행정수요는 상이

재정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류의 규모뿐 아니라 체류의 강도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26년 1/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2026)

진단 종합

세 가지 미스매치

1 지표 미스매치

재정은 등록인구 기준으로 배분,
행정수요는 체류인구가 유발

배분 기준과 수요 발생원이 분리

2 공간 미스매치

재정 단위는 시·군·구,
체류와 소비는 생활권 단위로 발생

행정경계가 분석 단위를 왜곡

3 시간 미스매치

재정은 연 단위 결산,
체류는 계절·요일·시간대 단위

연 단위 지표로는 포착 불가

세 미스매치를 그대로 둔 채 재원만 확대할 경우, 성과는 계속 포착되지 않음

설계안 ① · 지표 설계

생활인구 기반 재정성과지표 신설

1 체류전환율 — 규모 — 그 지역이 감당하는 행정수요의 배수

체류인구 ÷ 등록인구

2 상주환산 생활인구 — 강도 — 체류시간을 반영한 상주인구 환산

등록인구 + 체류인구 × (평균 체류일수 × 평균 체류시간 ÷ 720)

3 체류소비유발도 — 경제 — 투입 재정 1원이 유발한 역내 소비

체류인구 카드사용액 ÷ 기금 투입액

②를 적용하면 전국 배수는 **4.3배에서 1.2배**로 변화.

동일한 데이터라도 측정 대상에 따라 재정이 대응해야 할 인구 규모가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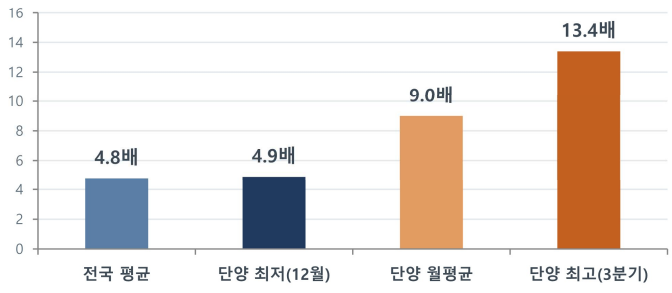
환산계수 예시: 평균 체류일수 3.2일 × 평균 체류시간 11.7시간 ÷ 720시간 ≒ 0.052 (2025년 6월 기준)

13

설계안 ② · 적용 예시

충북 단양군 적용 결과

충북 단양군 체류전환율 (2024년 기준, 등록인구 약 2.7만 명)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

높은 배수는 지자체 홍보와 언론에서 지역 활력의 근거로 널리 인용되고 있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해당 배수를 어느 시점, 어떤 규칙으로 산정해 재정에 반영할지는 정해진 바 없음

동일 지역, 동일 연도에서 4.9배와 13.4배 — 적용 값에 따라 재정 판단이 2.7배 달라진다.

자료: 행정안전부·통계청 『2024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 단양군 분석(2025) 및 언론보도 종합

14

설계안 ③ · 산정 원칙

지표값이 아닌 산정 규칙의 설계

1 기준 시점

12개월 이동평균

체류인구 카드사용액 비중은 25년 10월 38.9%에서 12월 31.1%로 변동했다. 단일 시점 값은 계절 요인에 좌우된다.

2 유형 보정

체류 유형별 가중치

단기숙박형은 여성·30~40대·비인접 시도 거주자, 통근·통학형은 남성·동일 시도 거주자 비중이 높다.

3 변동성 반영

평균과 변동계수 병기

단양은 동일 연도에 4.9~13.4배의 변동을 보였다. 변동이 큰 지역일수록 기반시설 운영 부담이 크다.

세 원칙을 적용하면 단양의 체류전환율은 단일 값이 아니라 '9.0배 ± 계절변동' 형태로 표현됨

15

설계안 ④ · 실현 조건 검토

제안 지표의 산출 가능성 검토

제안 지표	필요 데이터	현재 가용성	산출 단위	주요 제약
체류전환율	생활인구 공표자료	**즉시 산출 가능**	시·군·구 / 월	체류인구 중복 계산
상주환산 생활인구	생활인구 + 평균 체류일수·체류시간	**즉시 산출 가능**	시·군·구 / 월	환산계수 합의 필요
체류소비유발도	생활인구 카드소비 + 기금 배분 내역	**부분적으로 가능**	시·군·구 / 분기	사업 단위 매칭 불가

세 지표 중 둘은 즉시, 하나는 부분적으로 산출 가능하다. 신규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모두 이미 공표되고 있는 값의 조합이다. 남은 쟁점은 데이터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환산계수와 산정 규칙에 대한 합의다.

가용성 판단은 현재 공표되고 있는 통계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임

16

설계안 ⑤ · 제도 간 정합성

측정 체계의 연계 방향



◀ 측정 결과의 환류: 재정분석에서 산출된 생활인구 지표가 다른 두 제도의 판단 근거로 공유

제도의 개편이 아닌 공통 지표의 도입

지방재정분석은 이미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매년 수행되는 법정 절차로, 여기에 생활인구 부문을 추가하면
세 제도가 공통으로 참조할 지표가 확보되어 각 제도의 배분 방식이나 평가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도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음

17

정리

결론

1 **세 재정수단은 상이한 인구 개념 위에서 작동**

기금은 인구 개념 없이 계획 완성도를, 교부세는 생활인구를, 재정분석은 등록인구를 전제.
→ 지방정부가 받는 성과 신호가 일관되지 않음

2 **간극을 메울 데이터는 이미 축적중**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4.3배, 역내 카드소비의 33%를 차지하여, 새로운 조사 없이 공표 통계만으로 지표 산출이 가능.

3 **필요한 것은 제도 개편이 아닌 공통 지표**

각 제도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지 않고도, 세 수단이 공통으로 참조할 생활인구 지표를 두는 것만으로 성과 신호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음

정책적 시사점 · 재정배분의 기준을 인구의 '규모'에서 체류·소비의 '전환율'로 이동시켜야 함

18

논의의 범위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전제 조건

- 생활인구는 2024년부터 산정된 실험적통계로, 시계열이 짧아 성과 시차 검증이 불가
- 체류인구는 중복 계산을 포함하므로 배수의 단순 해석에 주의가 필요
- 상주환산 계수는 전국 평균값을 적용한 예시이며, 지역별 실측 검증이 필요
- 본 발표는 지표 설계의 논점 제시에 한정되며, 실증 검증은 별도의 과제임

후속 과제

-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패널 구축 및 유형화
- 기금 배분액과 체류·소비 지표 간 상관관계 실증 분석
- 체류인구의 행정수요 유발 계수 추정 및 환산계수 실증
- 정주전환율 산출을 위한 체류유형·전입자료 결합 (현재는 개인 단위 연계 제약)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무엇을 성과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다.

19

토론 논점

남은 쟁점 세 가지

1. **실험적 통계를 법정 재정배분 기준으로 쓸 수 있는가**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카드사 범위 변경으로 연도 간 비교마저 제약됨에도 이미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고 있음
2. **체류인구는 누구의 성과인가**
   인접 지역 간 제로섬이 될 수 있으므로, 배후 도시 주민의 소비를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성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3. **재정 인센티브가 행태를 왜곡하지 않는가**
   체류인구 지표가 배분 기준이 되는 순간, 단기 이벤트로 수치를 제고하려는 유인이 발생하며, 측정 가능한 것만 관리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26년 1/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실험직통계 제2024-002호
- 국회예산정책처(2026),『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 행정안전부(2025),「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확정」보도자료
- 행정안전부(2025),「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 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89개 인구감소지역 · 18개 관심지역)
- 국회입법조사처·국회예산정책처(2025),『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Ⅲ』
- 나라살림연구소(2025),『2022~2025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내역』
- 행정안전부·통계청(2025),『2024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및 단양군 분석자료
- 국가데이터처 나우캐스트,「생활인구 통계 이용자 유의사항」
- 「지방재정법」제55조 및「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한국정책개발학회-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
2026 하계 학술대회

세션3: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설계
정서적 고갈과 사회적 고립감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2026. 8. 27.

발제: 차경란(단국대)
토론: 진현희(단국대)

정서적 고갈과 사회적 고립감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2023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발표자 : 차경란

정서적 고갈 · 자기효능감 · 사회적 고립감

초고령사회와 사회적 고립 문제

초고령사회 진입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4천 명, 전체 인구의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는 관계망 부족과 사회적 고립 위험을 높이는 정책 환경으로 작용

사회적 고립 대응의 확장 필요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중심으로 예방정책을 추진

이러한 정책적 논의 속에서 관계망뿐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정서적.심리적 요인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노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사회적 고립을 이해할 때 관계망과 함께 정서적 고갈과 자기효능감 같은 심리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자료: 통계청(2025) 「2025 고령자 통계」; 보건복지부(2023)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

1. 연구 배경

기존 접근: 객관적 관계망 중심

-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급증:** 물리적 관계망 부족 중심의 고립대응에 집중
- **설명의 한계:** 객관적 관계망이 존재하더라도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주관적 고립감' 현상 증가

본 연구: 심리적 자원 소진 중심

- ✓ **정서적 고갈(Exhaustion) 주목:** 일상 및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에너지 고갈이 관계 형성을 저해
- ✓ **통합적 경로 규명:** 사회적 고립을 물리적 단절을 넘어 '내면적 자원 소진 및 자기효능감 저하' 과정으로 확장

2. 연구 목적과 차별성

본 연구의 핵심 질문

1. 정서적 고갈은 사회적 고립감을 높이는가?
2. 정서적 고갈은 자기효능감을 낮추는가?
3.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고립감을 낮추는가?
4. **자기효능감은 두 변수 사이를 매개하는가?**

학술적 차별성

1. 일반 성인 대상 검증
특정 직무집단(감정노동자 등)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일반 성인으로 확장

2. 인지·심리적 매개 경로 규명
'정서적 고갈 → 자기효능감 → 사회적 고립감'의 구체적 메커니즘 확인

3. 철저한 사회인구학적 통제
성별·혼인·학력·지역·연령·소득·건강상태 등 주요 통제변수 포함

3. 연구 모형 및 가설



가설 1 & 2

H1: 정서적 고갈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높아질 것이다

H2: 정서적 고갈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3 & 4

H3: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낮아질 것이다.

H4: 자기효능감이 정서적 고갈과 사회적 고립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통제변수 (Control)

- 인구학적: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 사회경제: 최종학력, 거주지역
- 객관/주관: 주관적 가구소득, 건강상태

4. 자료와 측정변수

구분	변수명	측정 문항 요약	척도 구성
독립변수	정서적 고갈	삶의 여유 없음, 일 후 피로/지침, 해야 할 일의 버거움	리커트 5점 척도 (3문항 평균)
매개변수	자기효능감	성취감, 잘하는 일 유무, 일의 가치 (역코딩 포함)	리커트 5점 척도 (3문항 평균)
종속변수	사회적 고립감	교제 부족, 고립감, 소외감	리커트 5점 척도 (3문항 평균)
분석 자료	2023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전국 대표성 표본 자료 활용		

분석 표본 수: 회귀분석 N=1,197 / 매개효과 분석 N=1,181 (Jamovi 2.6 프로그램 활용, 완전제거법 적용으로 매개변수 결측값 일부 제외)

5. 분석 절차

Step 1
빈도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 파악 (성별, 연령, 소득, 건강 등)

Step 2
기술통계 · 신뢰도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Cronbach's α 검증

Step 3
상관관계 분석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한 변수 간 다중공선성 및 관련성 검토

Step 4
위계적 회귀분석
통제변수 입력 전/후 정서적 고갈의 사회적 고립감 영향 확인

Step 5
매개효과 검증
GLM 매개모형적용 및 **5,000회 부트스트래핑** (95% CI)

매개효과 유의성 판단 기준: 편의수정 Bootstrapping 5,000회 실시 후 95%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함.

6.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결과

변수	역할	문항수	평균 (5점 척도)	Cronbach's α
사회적 고립감	종속변수	3개	1.71	.879
정서적 고갈	독립변수	3개	2.25	.770
자기효능감	매개변수	3개	3.58	.680

자기효능감 신뢰도 계수(α=.680) 학술적 방어 근거

일반적으로 α ≥ .70을 선호하나,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 척도는 **3개 단일 문항**으로 구성된 2차 자료(KGSS)의 특성을 지님.
학술적 기준(Nunnally, 1978; Hair et al., 2010)에 따르면 문항 수가 적은 탐색적 연구에서는 **α ≥ .60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으로 판단함.

7.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결과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 **정서적 고갈 ↔ 사회적 고립감:** r = .444*** (정적)
- **정서적 고갈 ↔ 자기효능감:** r = -.283*** (부적)
- **자기효능감 ↔ 사회적 고립감:** r = -.311*** (부적)

회귀분석 (독립-정서적고갈 → 종속-사회적고립감)

모형 1 (통제변수 미포함):

B = .438* (R^2 = .197)**

모형 2 (통제변수 포함):

B = .370* (R^2 = .280)**

가설 1 지지: 성별, 연령, 소득, 건강상태 등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정서적 고갈이 사회적 고립감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됨 (p < .001).

- 모든 변수의 상관계수는 절대값 .5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8.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결과

분석 경로 / 효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SE)	95% 신뢰구간 (CI)	p 값	결과 판정
경로 a (독립-정서적고갈 → 매개-자기효능감)	-.137	.024	[-.184, -.090]	< .001	H2 채택
경로 b (매개-자기효능감 → 종속-사회적 고립감)	-.235	.034	[-.302, -.168]	< .001	H3 채택
직접효과 (c')	.336	.027	[.279, .389]	< .001	유의함
간접효과 (a × b)	**.032**	.007	**[.020, .049]**	**< .001**	**H4 채택 (매개성립)**
총효과 (c)	.370	.026	[.313, .424]	< .001	유의함

✓ **가설 2 지지:** 정서적 고갈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침 (a = -.137***)

✓ **가설 3 지지:**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고립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침 (b = -.235***)

✓ **가설 4 지지:**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고갈–사회적 고립감 관계를 부분매개함 (간접효과=.032***, 95%CI[.020,.049])

부트스트래핑 검증 (5,000회):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20, .049]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함.
매개변수 투입 후에도 직접효과(B=.336)가 여전히 유의하므로 자기효능감은 두 변수 사이를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함.

9. 결론 및 실천·정책적 시사점

정서적 고갈은 사회적 고립감을 높이며 자기 효능감 저하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사회적 고립은 관계망의 부족만이 아니라 정서적 고갈과 자기효능감 같은 심리적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을 설계할 때에는 관계망 확대뿐 아니라 정서적 부담 완화와 자기효능감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단계적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계별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 로드맵

01
고립 위험군 발굴
고립 위험군 발굴 시 단순 소득·관계망 외 **정서적 고갈 상태 측정** 병행

02
정서 회복 지원
관계 형성 프로그램 전 **심리적 휴식 및 스트레스 소진 완화** 선행 지원

03
자기효능감 증진
작은 성공 경험(루틴 형성, 자율 과업)을 통한 **자기효능감 회복** 워크숍

04
지역사회 관계 참여
에너지 회복 후 자발적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자원 연결** 자율 참여

본 연구 결과를 노인에게 직접 일반화하기보다는, 초고령사회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을 설계하는 데 참고 할 수 있는 기초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10.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언

⚠ 연구의 한계점

- **횡단연구의 한계:** 단일 시점 조사로 엄밀한 인과관계 추론에 제약
- **2차 자료 한계:** 매개변수(자기효능감) 표준화 척도 직접 적용 불가
- **추가 외생변수 미통제:** 우울, 외로움, 사회적 지지 등 통합 통제 한계

후속연구 제언

- **종단자료 활용:**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시공간적 선후관계 검증
- **검증된 척도 도입:**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 등 전용 척도 적용
- **고령층 대상 검증 : 독거노인 및 고립 위험 노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매개경로가 나타나는지 직접 검증**
- **취약집단 비교:** 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집단과의 비교연구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적 고갈과 사회적 고립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 경로를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김지범·강정한·김석호·김창환·박원호·이윤석·최슬기·김솔이. (2024).『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3』.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박찬웅·김노을·유부원·윤민지. (2020). 한국 사회의 사회적 고립과 사회인구학적 특성.『한국사회』, 21(2), 41-73.

보건복지부. (2023).『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Hobfoll, S. E. (1989).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4*(3), 513-524.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 (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397-422.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MIT Press.

Bevilacqua, G., Westbury, L. D., Bloom, I., Zhang, J., Lawrence, W. T., Barker, M. E., Ward, K. A., & Dennison, E. M. (2024). General self-efficacy, not musculoskeletal health, was associated with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n older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ging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36*, 20.

Lee, J. W., Nersesian, P. V., Suen, J. J., Mensah Cudjoe, T. K., Gill, J., Szanton, S. L., & Hladek, M. D. (2023). Loneliness is associated with lower coping self-efficacy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42*(2), 270-279.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서적 고갈 · 자기효능감 · 사회적 고립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

14